지식경제부 4년, 성과와 과제

지식경제부 기획조정실

지식경제부의 출범

지식경제부는 지난 '08년 기존의 산자부, 정통부, 과기부 등으로 분산된 실물경제 정책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하였습니다.

이러한 통합의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실물경제 정책기능의 중복과 분산으로 인한 비효율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03년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추진시 산자, 정통, 과기부 업무영역 조정에만 8개월이 걸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부처간 칸막이를 과감히 제거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식경제부라는 명칭에서도 드러나듯이 요소투입형 경제에서 지식기반 경제로 이행하고 있는 발전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융합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세계적인 대부처주의 조류에도 부응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출범한 지식경제부는 정통부의 IT산업 진흥과 우정사업 업무, 과기부의 산업기술 R&D 기능과 출연연, 재경부의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및 지역특구 업무를 이관받아 총정원은 1,100여명에서 3만2천여명으로, 유관 공공기관도 45개에서 60개로 늘어나는 등 명실상부한 실물경제의 주무부처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주요 업무실적

출범 초기 지식경제부는 '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정책역량을 결집하여 총력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매월 지경부 안건을 1건 이상 상정하는 등 위기극복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출 동력 유지를 위한 수출지원 체계를 가동하였습니다. 수출보증한도를 170조원으로 늘리고 연기금을 활용하여 플랜트 수주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신흥국 무역관을 지속 확대하여 향후 시장 진출 다변화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산업별로도 선제적 위기대응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특히 자동차 내수 활성화를 위해 노후차 교체시 세금감면 정책을 추진하였고 조선 등 주요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및 고도화 정책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단기적 대응 외에 중장기 성장 기반 확충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08년 17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여 LED, 태양광 등 녹색설비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 노력이 밑거름이 되어 '08년 132억의 적자를 기록했던 무역수지는 '09년 404억 달러, '10년 412억 달러, '11년 308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대규모 무역흑자에 힘입어 '08년 2,012억 달러에 불과하던 외환보유고는 '11년말에는 사상 최대규모인 3,064억 달러에 이르게 되었고 '08년 47.2%에 이르던 단기외채비중도 '11년말에는 34.2%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경제가 '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10년 유럽발 재정위기에 따른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건실한 성장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 지식경제부는 '09년부터 산업융합, 중견기업, 녹색성장 등 분야에서 본격적인 정책부서로서 위상을 정립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지식경제부 출범시 주요 임무 중 하나였던 산업융합과 관련, 산업융합촉진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하고, IT융합 확산전략, SW산업 및 시스템 반도체 등의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등 산업융합의 촉진 기반을 마련해 나갔습니다.

아울러, 중견기업이 미래 산업발전을 이끌어 나갈 동력이라는 인식 하에 산업발전법에 중견기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World Class 300 등 지원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외에 국가 경쟁력의 주요 요소인 R&D와 관련해서도 민간 주도 R&D 전략기획단을 설치하는 등 전반적인 혁신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된 녹색성장 분야에서도 한국형 원전의 UAE 수출이라는 쾌거를 통해 세계 6번째

원전 수출국 도약에 큰 역할을 하였고,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구축, 세계 2번째 양산형 전기차 개발 지원 등 녹색산업의 성장동력화에 역량을 투입하였습니다.

'10년 이후에는 동반성장, 산업자원협력 등으로 지식경제부의 정책 외연을 확대하였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과 SSM법 개정을 통해 동반성장 추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QWL밸리 추진과 R&D 인력양성 기능 강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이라크 원유 우선공급권 확보, UAE 유전 참여 등 해외 자원개발 확보 노력을 한층 강화하였으며, 알뜰주유소와 같은 유가안정책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에너지수급을 도모하였습니다.

주요 분야별 성과와 과제

무역 1조 달러 달성과 경제 영토 확대

'08년 이후 지식경제부 소관 주요 업무분야의 상황 변화와 성과를 살펴보면 우선 가장 두드러진 성과의 하나로 무역 부분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11년 우리나라는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등 8개국에 이어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 국가에 진입하였습니다. '08~'10년 세계 교역이 전체적으로 6.2% 감소한데 반해 우리는 4.0% 증가세를 보이며 금융위기 이후 신규 국가로는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달성하였습니다. 중국을 제외하고는 1인당 GDP 3~4만 달러 국가들만 달성한 성과를 우리가 이룩해 낸 것입니다.
아울러 '10년도에는 세계 7대 수출국으로 부상하였으며, 사실상 중계무역국인 네덜란드를 제외하면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표1. 무역 1조 달러 국가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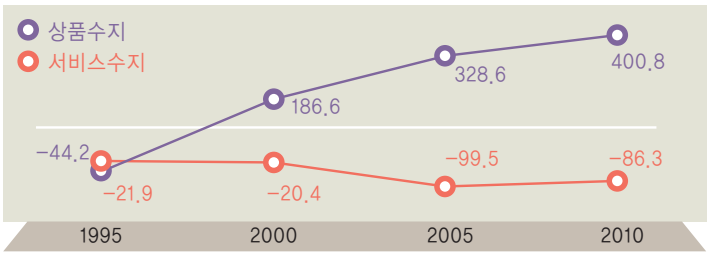
국가	미국	독일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한국
달성연도	1992	1998	2004		2006		2007		2011
달성소요기간	1천억 달러 → 1조 달러 : 평균 26.4년 5천억 달러 → 1조 달러 : 평균 8.4년								23년 6년
1인당 GDP($) (2010)	46,860	40,274	4,382	42,783	40,704	36,164	46,986	34,059	20,756

아울러, 한-미, 한-EU FTA 발효를 통해 우리의 경제영토가 전세계 GDP의 61%를 차지하며 세계 3위 수준으로 확대되면서 선진 통상국가로 부상하는 발판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95년~'10년 동안 상품무역 수지 흑자가 두 배가 되는 사이 서비스 무역수지의 적자폭은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이 지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무역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서비스 수출 확대와 중소기업 수출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에 더욱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림1. 상품 및 서비스 무역수지 추이(억불)



* 서비스 무역수지 적자 주요 요인
- 관광수지(억불)
  : ('00) △3.0 → ('10) △84.2
- 지재권사용료(억불)
  : ('00) △25.3 → ('10) △58.9

주력산업의 세계적 경쟁력 유지와 신성장산업 발전 기반 마련

세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주력 산업은 그간 다져진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 수위권을 지속 유지하였습니다.
민간 기업들이 가격 및 기술경쟁력을 활용하여 수출 확대를 주도하고, 정부는 수출보험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이를 측면에서 지원함으로써 주력 산업 분야 세계 시장 점유율이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조선과 디스플레이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세계 1위를 기록하였으며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에서도 세계 5위권 이내의 경쟁력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림2. 주요 주력산업 분야 시장 점유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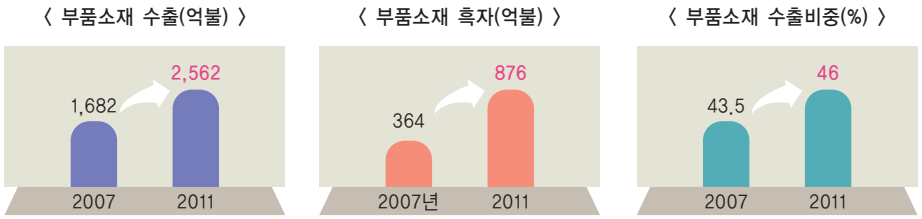
조선(수주 점유율)	(2007) 34.9% →	(2011) 48.2%(세계 1위)
디스플레이(시장 점유율)	(2007) 38.5% →	(2011) 45.1%(세계 1위)
반도체(수출액)	(2007) 390억불 →	(2011) 501억불(세계 3위)
자동차(생산 점유율)	(2007) 7.0% →	(2010) 8.9%(세계 5위)
철강(전세계 조강생산 비중)	(2007) 3.8% →	(2011) 4.5%(세계 5위)

전통적으로 경쟁력 취약 분야이자 수입의존 분야로 지적되었던 소재 · 부품 분야 역시 '08~'12년간 1.8조원에 이르는 부품소재 R&D 지원 예산과 기업들의 투자 확대에 힘입어 '11년 기준 사상 최대 수출 및 무역 흑자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신성장동력 산업도 '09년 17대 신성장동력 발표 이후 정부의 정책 지원이 확대되고 기업들의 투자가 급증('09년 17.2조원 → '11년 23.4조원)하면서 LED, 이차전지, 로봇산업 분야에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국내외 시장 규모를 늘려나가는 등 일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림3. 부품소재 분야 주요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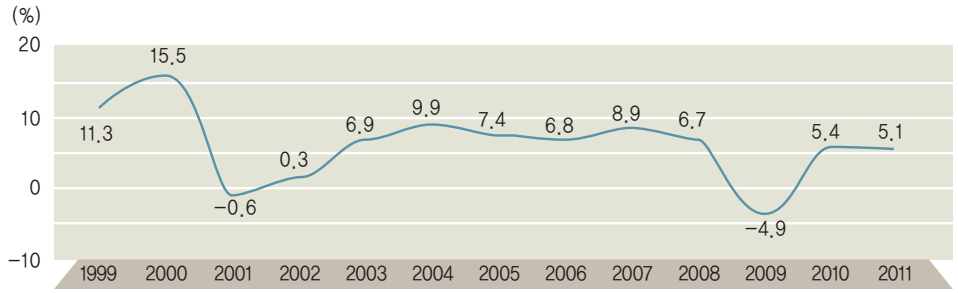
다만 아직도 신성장산업 전반에 걸친 성과확산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고, 주력 산업도 핵심 부품소재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고부가가치화를 지속 추진하고 후발주자들에 대한 기술격차를 유지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IT 진흥 · 규제 분리로 IT 산업 경쟁력 제고와 IT 융합 기반 확충

IT 산업 또한 지식경제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08~'11년 한국의 IT 산업 성장률은 세계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9.6%를 기록하였습니다. IT 수출도 '07년 1,301억불로 세계 6위이던 것이 '11년 1,570억불로 세계 5위에 올라섰고, 스마트폰 세계시장 점유율도 '07년 2%로 세계 7위이던 것이 '11년 24%로 세계 1위로 비약적인 성장을 하였습니다.

특히 IT 융합이 IT 산업의 새로운 성장 견인차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세계 IT 시장은 '00년 이후 한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면서 '11년 5.1% 성장률을 보인 반면 IT 융합 산업은 12%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림4. 세계 IT 시장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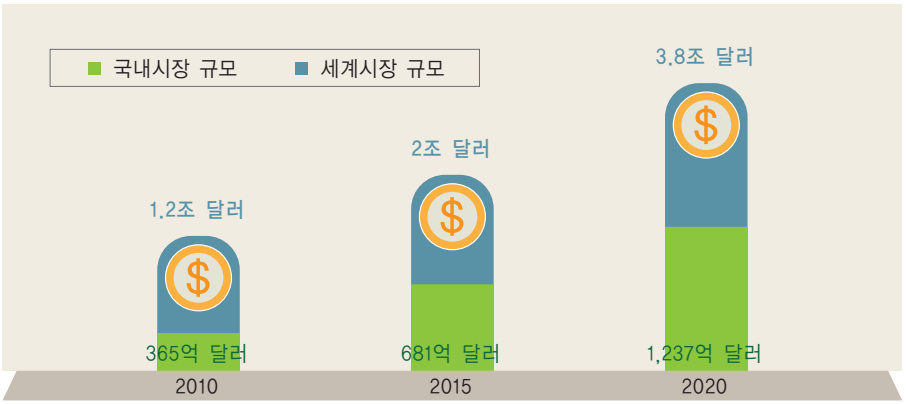
[2000년 IT 버블 붕괴를 기점으로 한 자릿수 성장]

국내 IT 융합생산의 경우 '07년 38.7조원에서 '11년 49.7조원으로 늘어났으며 '20년까지 연평균 13% 정도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IT와 조선이 결합된 선박이동통신 기술이 세계 유수

해운사에 채택되었고 최근 인니 수출에 성공한 T-50에도 IT와 항공기술이 융합된 항공기 운용 SW가 탑재되는 등 융합 기술개발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IT 분야 기술력과 특허창출 능력도 세계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금년 미국 Patent Board의 특허종합평가 결과 우리나라 ETRI가 미국 MIT, 독일 프라운호퍼 등을 제치고 전세계 대학 연구기관 237개 중 1위를 차지한 것이 그 좋은 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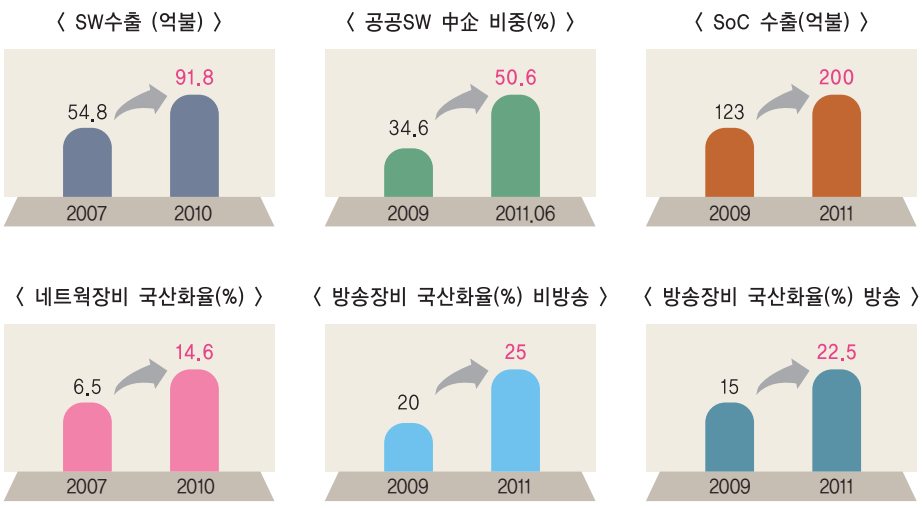
그림5. 세계 IT융합 시장 규모 전망



[IT융합의 세계시장 및 국내시장은 각각 연평균 11.5%, 13% 성장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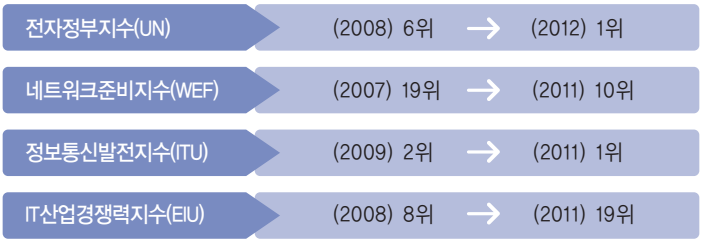
한편 전통적으로 취약분야로 분류되던 SW, SoC, IT 네트워크 장비 등의 수출과 국산화율도 지경부 출범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림6. IT 산업 부문의 성장세



이러한 성장세에 힘입어 전자정부 지수, 정보통신 발전 지수, 네트워크 준비 지수 등 IT 인프라 및 경쟁력 관련 지수도 현 정부 출범 전에 비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림7. IT 인프라 및 경쟁력 관련 지수



다만 EIU가 발표하는 IT산업 경쟁력지수만이 '08년 8위에서 '11년 19위로 유일하게 하락되었습니다만, 이에는 평가기준 변경과 과거 자료 사용이라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09년까지 평가기준이 되던 IT관련 특허 출원건수가 전체특허 출원 대비 IT 비중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0년 기준 전체 산업기술 출원건수는 세계 4위(35만건), PCT 국제특허출원건수도 세계 5위 수준으로 전 산업에 걸쳐 특허출원건수가 많으며, 따라서 IT관련 특허출원건수도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IT관련 특허출원건수로 평가할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상위로 평가될 수 있으나, 전체 특허출원건수 중 IT 비중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IT관련 출원건수가 우리나라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더라도 전체출원건수 중 IT관련 특허출원비중이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상위로 평가받을 수 있으므로 평가의 왜곡을 초래하게 됩니다.
더욱이, EIU는 '11년 동 지수 산정시 과거 자료인 '07년 R&D 특허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11년 IT산업 경쟁력지수 순위는 전혀 현실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경부 출범 이후 IT 산업에서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경부 출범 이후 정부 전체 IT 예산이 타분야 예산 증가율에 비해 높은 연평균 6.2%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등 정부의 역할도 일조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과거와 달리 IT 산업진흥 기능과 서비스 규제 기능을 분리하여 산업진흥기능은 지경부가, 서비스 규제기능은 방통위가 관장하도록 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거 「산업진흥 · 서비스 규제 통합형 모델」이라 할 수 있는 정통부에서는 초고속통신망 구축 등을 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전자정부와 높은 인터넷 보급률을 달성하는 등 우리나라가 IT 서비스 분야 세계 강국으로 등장하고, 우리 사회 전반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는 데 큰 기여를 한 바 있었습니다.

다만, 네크워크 장비 등 우리의 IT생산이 취약한 상황에서 급속도로 국가정보망을 구축하다보니 초고속통신 장비 등을 90%이상 외산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어 국내 산업의 발전 기반을 약화시킨 것이 문제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후 IT네트워크 장비 및 통신기술 등의 국산화 과정에서 정통부가 개발한 특정 기술이나 제품의 사용을 통신사업자 등에게 법적으로 혹은 행정지도로 강제한 일입니다. 세계 최고 독자기술 확보라는 큰 성과에도 불구하고, 통신사업자에 대한 기술 사용 강제는 세계 시장조류에 역행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국내 통신기기간 모바일 무선인터넷 호환을 위하여 '06년 개발한 WIPI 플랫폼을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이동통신 단말기에 탑재할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그 당시 우리나라 진출을 모색하던 외국 스마트폰 생산업체들의 우리시장 진입을 봉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산업 발전을 주요 선진국 대비 2년 정도 지연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세계시장에서 10%정도 점유율을 차지하는 Wibro에 대해 국내통신사업자 채용 확산을 유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LTE상용화 투자를 지연시킨 점, 보급 확산을 위해 무료서비스를 강제한 결과 기업들의 수익모델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상파 DMB 등도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산업진흥 · 서비스 규제 분리형 모델」로 볼 수 있는 현재의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체제에서는 산업진흥을 전담하는 지경부는 통신사나 방송사업자 등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 권한이 없어, 지경부 지원으로 개발한 기술이나 제품 사용을 통신사업자에게 강제하는 것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지경부 주도로 개발한 품목이나 기술도 시장에서 경쟁력이 입증되어야만 통신사업자나 제조업체에서 활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체제는 민간의 창의력과 기술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고, 이에 힘입어 지경부 출범 이후 IT산업의 성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IT 강국인 미국의 경우에도 정부의 산업진흥기능과 서비스 규제기능이 분리되어, 민간의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으로써 애플이나 구글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IT분야의 성장세를 발판으로 소프트웨어, SoC 등 아직 수입의존도가 높은 분야의 산업기반을 강화하고, IT와 제조업과의 융합을 넘어 농업, 교육, 국방 분야 등 전체 산업분야에 까지 확산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R&D 투자의 절대규모 확대와 효율성 제고가 관건

우리의 경쟁력 요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혁신 분야도 지경부 출범 이후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현 정부 5년간('08~'12) R&D 예산 규모는 총 68조원으로, 이는 참여정부 대비 70%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에 민간 투자까지 포함하면 전체 GDP대비 R&D 투자비중은 3.56으로 이스라엘, 핀란드, 스웨덴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을 보이고 있는 등 R&D 투자의 양적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1위 이스라엘(4.27), 2위 핀란드(3.96), 3위 스웨덴(3.61), 한국 OECD 평균(2.4)

R&D 사업화 성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특구 기술사업화 사업의 경우 예산 투입 대비 매출 비중이 '05~'07년 4.09였던 것에 비해 '08~'11년 11.1로 지경부 이관 이후 2배 이상 제고되었습니다. 지경부로 이관된 정부 출연 연구소의 기술이전 활동도 활발해졌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지경부 출범 이후 산업 기술 R&D 체제를 시장 수요에 맞게 사업화에 중점을 두어 끊임없이 혁신하고, 관리 규정과 전담 관리기관도 효율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것에 기인한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국가 R&D 투자액의 절대규모와 효율성은 타 국가들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R&D 투자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기술무역수지 배수(기술 수입액 대비 수출액 비중, 1 미만은 적자를 의미)는 '10년 기준 0.42로서 일본(3.77), 미국(1.56), 독일(1.21)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입니다.

그림8. 국별 R&D 투자규모 비교(억불,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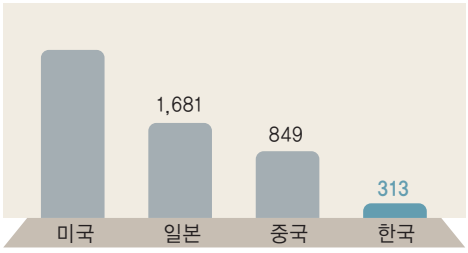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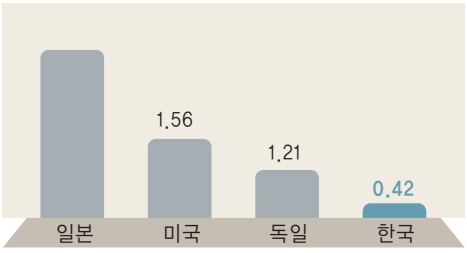


그림9. 기술무역수지 배수(수출액/수입액, '10)



후발 개도국의 기술추격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연구개발비 투자가 '05년 29,898백만불에서 '09년 84,933백만불로 3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다른 주요 국가에 비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기초나 응용연구보다 개발연구 분야 R&D 비중이 83%에 달하는 등 산업기술 분야 기술추격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초연구 인프라 측면에서 선진국과 격차가 큰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할 때, 기초연구보다는 개발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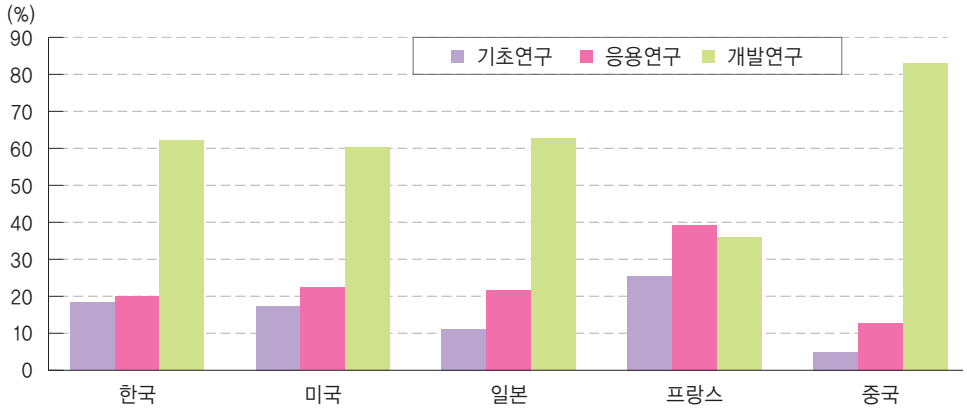
분야 투자비중을 확대하여 주력 산업 분야에서 중국과의 산업기술 격차를 지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향후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표2. 연도별 연구개발비 추이 (단위: U.S. 백만$)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한국	23,587	28,641	33,684	31,304	29,703	37,935
중국	29,898	37,664	48,771	66,430	84,933	
일본	151,270	148,526	150,791	168,125	169,047	
독일	69,317	73,737	84,148	97,457	92,552	92,490
영국	39,421	42,693	50,016	47,138	40,291	39,924
미국	325,936	350,923	377,594	403,668	401,576	

* 연도별 연구개발비는 PPP(구매력평가) 값을 U.S.$로 변환한 값임

그림10. 연구단계별 R&D 비율



* '08년 기준(단, 한국의 경우 '10년 기준)

중소제조업의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

중소기업의 경우 그간 많은 정책적 자원이 투입되었으나 영세화와 생산성 저하가 심화되고 있어 근본적인 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중소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 산업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완만히 증가하고 있으나, 중소제조기업의 경우 '06년 33만4천개에서 '09년 31만 8천개로 오히려 사업체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20인 이하의 영세 제조업체가 전체 제조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년 60%에서 '09년 75%로 크게 확대되고 있어 제조업의 영세화 경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10인 미만 제조업 사업체 비중은 '07년 현재 82%에 달해 미국(50.8%), 일본(52.5%) 심지어

중소기업 비중이 높다는 독일(60.5%)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그림11. 규모별 제조업 사업체수 변화 추이(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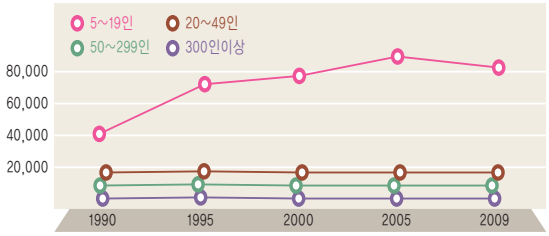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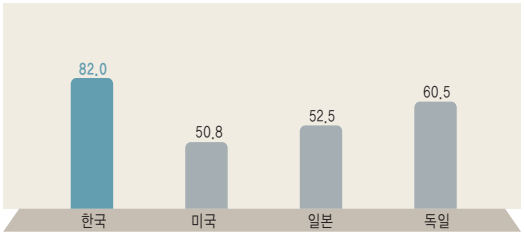


그림12. 제조업 사업체 중 10인 미만 업체 비중 비교('07)



중소 제조업의 생산성도 저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00년 이후 제조업 분야 진입률과 퇴출률은 그림 1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퇴출률은 진입률보다 더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KDI 안상훈 박사에 따르면 이는 새로운 혁신을 주도할 신규기업 참여는 줄어들고 퇴출되어야 할 저생산성 업체가 존속하여 생산성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림13. 제조업 진입률과 퇴출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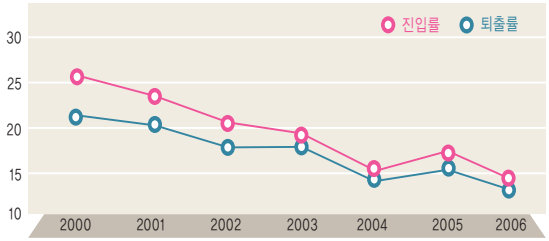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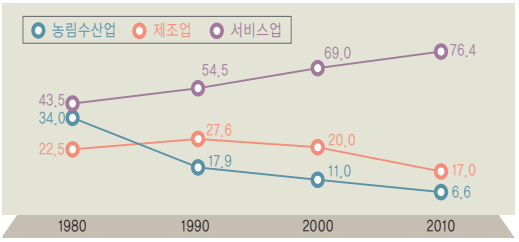


그림14. 산업별 취업비중(%)



한편, 음식 · 숙박 · 운수업 등 비제조업 분야 소규모 사업체, 이른바 소상공인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07~'09년 동안 음식숙박업 분야 소상공인수는 2만 7천개, 도소매업 분야 소상공인수는 5천개, 운수업 등 기타분야 소상공인수는 4만 4천개나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비제조업 분야 소상공인의 영세화도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10년 기준 소상공인의 60%가 월평균 매출 400만원 이하 수준이며, '11년 조사결과 소상공인의 90%가 매출 및 순이익이 정체 또는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영세화와 생산성 저하는 근본적으로 제조업이 약화되고 있는 데서 기인합니다.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내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 격화, 고부가가치화 및 업종전환에 대한 적기 대응 실패, 인력 · 기술 · 자금 · 판로 등 애로요인까지 겹쳐 제조업 분야 전반적인 경쟁력이 약화되어 제조업의 고용창출력이 크게 저하되었고, 이로 인한 과잉인력이 비제조업 분야로 유입되어 비제조업 분야 영세화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산업별 취업비중이라고 볼 수 있는데, 80년대 이후 산업별 취업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제조업은 80년대 22% 수준에서 '10년 17%까지 하락한 반면 서비스업 취업비중은 80년대 43.5%에서 76.4%까지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 영세화 추세에 대응하여 정부에서는 '96년 중소기업청을 발족한 후 '98년에는 구 통상산업부의 중기정책 기능을 이관하는 등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선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구분 없이 중소기업이라는 하나의 틀로 획일적 정책을 추진해 왔다는 점이 그간 정책의 문제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중소제조업 내부에서도 업종 · 시장상황 · 유망성을 검토하여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하지만 이러한 고려 없이 형평성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접근해 온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11년 기획재정부의 재정위험관리위원회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의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선착순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비제조업에 대해서도 다양한 업종특성을 고려한 체계적 정책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막대한 재정지원과 많은 지원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원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의 「제조업 소기업 편중현상 평가와 시사점」에 따르면 '92년부터 '06년까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예산은 약 80배나 증가하고,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1,400여개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지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중소기업의 의존도만 과도하게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일례로 '11년 11월 기획재정부 재정위험관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A사의 경우 '10년 한 해 매출액의 50%에 달하는 3.8억원의 지원자금을 지경부, 중기청, 특허청 등 3개 기관에서 중복적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소기업 지원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촉진하지 못하고,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안주하려는 행태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단계에서 중소기업 자격으로 누리던 각종 혜택이 소멸됨에 따라 중견기업 성장을 계속 미루면서 중소기업으로 잔류하려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자동차 기업인 B사의 경우 일부 자동차 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를 계속 조정하면서 중소기업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구 기업인 C사의 경우 중견기업에 진입하게 되자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중소 조달시장 참여자격을 유지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외국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포기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국내 공공시장에서는 버틸 수 있지만 국내 민간시장은 물론 해외시장은 외국기업에게 내 줄 수도 있는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영국의 주간지 Economist는 금년 3월 기사에서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환상을 버려야 하며 기업에

있어 중요한 것은 규모가 아니라 성장이다' 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유로존 위기 악화의 주요 원인제공 국가인 남유럽 국가들이 과도한 중소기업 보호 조치로 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중소기업간 공정 · 투명한 시장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아직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중소기업들이 지적하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인력 탈취 등은 대기업의 과도한 단기 성과주의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중소기업 정책방향은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일차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실질적으로 제고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데 주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중소제조업과 비제조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접근을 달리해야 할 것입니다. 중소제조업에 대해서는 국제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중견기업 및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 인센티브를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중소 제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비제조업 분야 과잉인력을 제조업으로 유도하는 것이 우리 중소기업이 당면한 영세화와 생산성 저하 문제를 풀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음식 · 숙박 · 운수업 등 비제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업종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업종 스펙트럼이 넓은 만큼 각 부처별로 관련 분야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를 위한 체계적 정책을 수립하고 위생 · 보건 · 안전과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성장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장정보 제공, 업종전환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과잉인력이 제조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해외 에너지자원 확보 노력과 에너지산업의 수출동력화

그간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에 따라 에너지 수요가 지속 증가해 왔습니다.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석유의존도는 '08년 53%에서 '11년 50%까지 감소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력은 '08년 18%에서 '11년 20% 까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식경제부는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해외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적극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석유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을 통한 해외 유망 에너지 자원 프로젝트 확보에 노력한 결과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은 '07년 4.2% 에서 '11년 13.7%로, 6대 전략광물 자주개발률은 '07년 18.5%에서 '11년 29%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강력한 에너지절약 정책을 통한 수요 관리에도 집중하였습니다. 자동차 연비제도 개선, 전열기

효율 규제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을 측정하는 에너지 원단위도 개선하였습니다.
에너지 산업의 수출동력화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UAE 원전 수출을 통해 세계 6번째 원전수출국으로 도약하였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전체 에너지 중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미하지만 매출, 수출, 고용 측면에서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IT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스마트그리드 육성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림15. 전체 에너지 도입 및 소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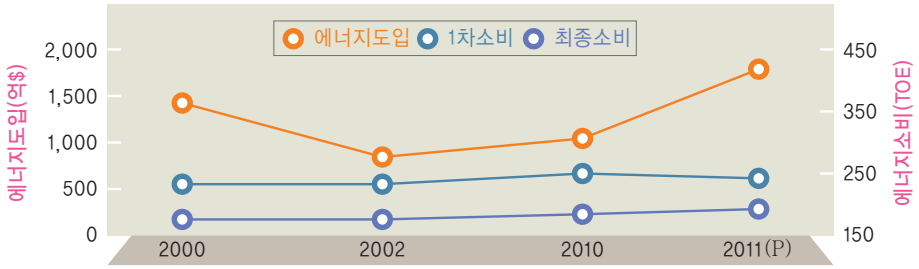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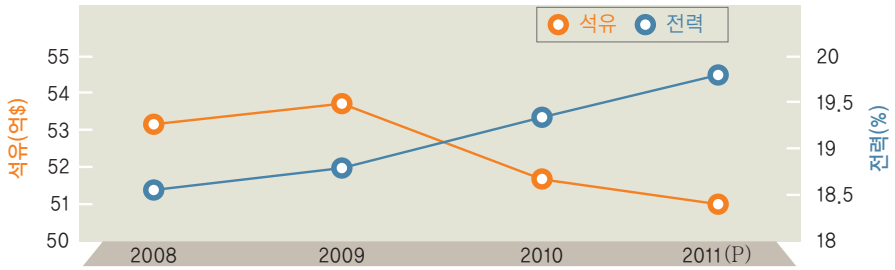


그림16. 최종에너지 소비 중 석유 · 전력 비중(%)



그러나 '11년 9월 발생한 정전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구조의 왜곡문제는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최근 발생한 발전소 사고 등 기존 발전소의 노후화에 따른 대응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에너지 공기업의 지배구조와 정부의 관리영역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향후 지식경제부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확보에 주력하면서 에너지 수급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